

# 민주-더시민 합당... 전원 동의로 결의

## “첫 1년이 정권 재창출 시금석”

흡수 합당 방식으로  
당원 승계하되 자격 심사  
이르면 15일 선관위 신고  
법적 절차 진행키로

더불어민주당과 21대 총선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3일 합당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더시민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전원 동의로 결의했다. 또한 합당방식 등의 안건도 이견 없이 의결했다.

재윤경 더시민 대변인은 합동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열어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민주당이 시민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당이 이루어지며 당명은 더불어민주당, 약칭은 민주당과 더민주를 병기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강령 및 정강·정책, 당헌은 합당 전 민주당의 강령과 정강·정책, 당헌이 승계되었다”며 “더불어시민당 당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하되 별도의 당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흥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헌 승계 건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 당규를 개정해 합당에 따른 특례규정을 하나 신설했다”며 “시민당 당원을 민주당 당원으로 승계하되, 기존 민주당 당원 규정에 따라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의를 위해 탈당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심사 판정을 받아야 하는 거로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희중 더불어시민당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선관위 신고 등의 법적 절차는 이르면 오는 15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 승계 작업 등에 이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밖에 차입금과 관련해 제 대변인은 “당연히 돌려줄 것”이라며 “차입금 대부분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집행했는데, 선관위에서 보조되는 비용 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쓴 돈 대부분을 돌려받았고, 돌려받은 돈으로 갚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첫 1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겸손한 자세로 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합당하면 민주당은 177석의 단일 정당, 단일 교섭단체로 거듭나게 된다. 당세가 커진 만큼 커진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이번 국회의 첫 1년을 어떻게 보내

느냐에 따라 민주개혁세력이 정권을 재창출하여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인의 자세와 국가미래를 책임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양당은 통합된 힘으로 ‘일하는 국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우희중 더시민 대표는 “(더시민) 출범 취지에 맞춰 민주당과 합당함으로써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후보들이 민주당의 넉넉한 품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달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껴어있는 시민의 열정과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하나 되어 호시우보의 자세로 나아갈 때 사회의 적폐 청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윤미향 “할머니와 활동가 분열시키고 정의연 정당성 훼손”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13일 정의연역연대(정의연) 기부금 용처 불투명성 문제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들에 대해 “처음부터 팩트나 활동이 갖는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 할머니와 활동가들을 분열시키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30년 목소리를 죽이고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온 사실을 언급하며 “너무 잔인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가 돼 제 목소리에 제약을 가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지 않을까”라며 정의연 기부금 회계 내역 정리와 관련하여서는 “단 한 명의 실무자가 회계정리,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 모집 허가 신청 및 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연 기부금 상세 사용처 중 맥주 집에서 3300만원을 지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공시자료에) 깨알같이 쓸 수가 없다”며 140여차례 진행된 모금행사 지출 총액을 하나의 항목에 모아서 처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명이 돼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영수증과 기부자를 공개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문제가 이어진다”며 “김복동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부모님에도 일일이 접촉을 해서 공격해, 이 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의혹에 대해서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년상 철거’ 등의 조항과 관련해선, “모두 다 충격이었다. 그 이야기는 언론과 우리, 어느 누구도 접하지 못했던 사실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의 접근 필요”

이낙연 민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움서 “인간 본성까지 바꾸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3일 “그동안 우리 주변의 ‘포스트 코로나’ 논의는 주로 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산업도 결국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만큼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움’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의 일상이 디지털화, 비대면화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간관계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이는 인간 본성까지 송두리째 바꾸지는 않는다. 그것 없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

다. 이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았다고 했다. 단계적 확대를 위한 출발을 정부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복지의 사각지대 줄이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사람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호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은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위기가 과감한 미래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여력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고 부동산에 지난해 기준으로 2100조원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기업이 가진 2000조원에 가까운 자금과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약 700조 정도의 국가재정 등을 활용하면 미래를 선도하고 시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위대한 도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의료·교육·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시스

### ‘전략기획 전문’

민주, 전략기획위원장에  
진성준 당선인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13일 21대 총선 서울 강서구를 진성준 당선인을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영진 의원이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자리로 옮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본인 기억으로는 4번째 임명이라고 할 정도로 전략기획위원장 전문”이라고 평가했다.

진 선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 임명됐다. 이듬해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지난 19대 총선 때 민주당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이번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뉴시스

### 권익위, 문 정부 출범 3년 ‘결정적 순간’ 선정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반부패협의회 부활 등 10장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반부패·공정 개혁, 국민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했던 가장 중요한 순간 10장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첫번째 장면으로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꼽았다.

권익위는 “강력한 반부패 개혁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10년 만에 복원했다”며 “이로써 개별기관 단위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기반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2019년 2월 20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도 결정적 장면에 포함됐다.

2년간(2017~2018년)의 실태점검 결과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3294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채용실태 전수점검 결과는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점도 결정적 장면에 넣었다.

이 밖에 ▲생활직폐대책협의회 출범(2018년 12월10일)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9년 4월16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대상법을 대폭 확대(2020년 4월29일) ▲군산시 비안도 도선운항 등 집단민원 현장조정(2018년 12월18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도입(2018년 11월1일) ▲‘한눈에 보는 민원박테이더’ 개통(2019년 1월30일)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2019년 10월1일)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